

ITS 정책토론회

박상조

(교통개발연구원 ITS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난 6월 11일 “2003 ITS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ITS 정책토론회가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의 후원을 받아 본 학회와 대한교통학회, ITS Korea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ITS 기술정책”과 “ITS 종합정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술정책에 대한 토론은 “ITS 연구개발 및 표준”과 “ITS 사업” 두 개의 분과에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종합정책에 대한 토론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의 ITS 정책방향발표와 교통, 통신 분야 전문가의 정책진단에 이어 “ITS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패널토의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ITS 종합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다.

1. ITS 기술정책

“ITS 연구개발 및 표준” 분과에서는 국가 ITS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국가 ITS 표준화 정책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방향, ITS 활성화 및 기술발전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ITS 사업” 분과에서는 수도권 국도 ITS, 고속도로 ITS, 서울시 BMS 사업의 추진주체가 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ITS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자신의 경험과 정책적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2. ITS 종합정책

1) 정책 및 진단

ITS 종합정책은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의 ITS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의 이상협 과장은 1997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건설교통부 ITS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협 과장은 예산의 부족, 전략적 목표와 투자자의 분산, 시스템간 정보전달·통합 및 연계의 미흡, 시스템구축 중심의 사업추진, 지방 전문가 육성기회 및 참여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국비지원의 지속적 확대, ITS의 교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교통정보통합 및 기술표준제시, 시스템 연계의 확보, 시스템 운영, 관리의 비중강화, 시스템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의 박재문 과장은 교통정보 수집·유통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표준화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ETCS의 무선통신기술 문제 및 서비스 지연, 계획과 재원의 연계성 미흡, 교통정보 유통활성화 미흡, 수요자의 요구 고려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향후의 ITS 정책방향으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 및 교통정보의 효율적 수집·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검토, ITS 유무선 통신망 연동을 위한 표준화, 교통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국제협력과 산업

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ITS 정책진단에서는 교통 및 통신분야의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찬 교수는 국내의 ITS가 짧은 도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의 ITS 기본계획, ITS 구축사업, ITS 센터의 운영체제,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찬 교수는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ITS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장기적으로 소통중심의 목표에서 탈피하여 환경친화, 교통안전 교통체계 구축을 ITS 구축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앙대학교의 김준년 교수는 ITS 통신관련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 기관의 현황을 검토한 후, ITS 통신에 대한 시각, 통신 관련기관의 역할, 새로운 기술의 수용의지, 통신분야의 표준화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하였다.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간의 의견조정 및 역할분담, 관련기관의 역할조정을 ITS 성공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를 수행하는 ITS 실무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패널토의 - ITS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양대학교 도철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9인의 토론자가 IT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토론자의 의견을 토론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강원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도교통관리시스템 사업은 해당 국도노선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차원의 ITS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건교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ITS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정보의 통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본의 VICS와 같은 민·관 합동기구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셈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ITS사업의 공정별 품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철 (교통개발연구원)

전체 국가 R&D 투자에서 ITS 부문이 차지하는 규모가 미미하다. 이것은 연구개발이 교통체계개선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1997년 ITS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0년 국가기본계획 21이 수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작업이 필요하다. ITS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검토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 ITS와 지자체 ITS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 정보통신, 산업,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기구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ITS 사업이 국가의 전략사업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특화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 전략사업화가 필요하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기금을 조성하고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하며, 민간의 matching fund도 활용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 기구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용재 (중앙대학교)

현재까지 ITS 구축의 밀그램 없이 지역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그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ITS가 도로시설의 건설에 포함 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Life Cycle이 짧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기술확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박재문 (정보통신부)

여러 토론자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처간 협의기구 는 이미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협의기구를 발전시켜나갈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DSRC 표준의 문제는 “국가의 통신인프라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송상근 (동아일보)

ITS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전문가들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IT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확보나 기구의 구성은 기획예산처, 국회, 시민단체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도 이런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승환 (아주대학교)

ITS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FTMS, 버스카드 등의 사업의 효과를 알려나가야 한다.

사업기획, 예산확보, 사업추진 및 조정을 위해서는 부처간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ITS 실무조정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개발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기술의 효과검증은 미진했다.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사업시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효과검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정보제공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신뢰할 만한 교통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교통정보통합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정보교환표준안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센터의 전문 운영인력 양성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ITS사업의 국내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도 강화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고인석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남산교통정보시스템, 서울시 BMS 등의 ITS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요소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성능평가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효과와 이용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며, ITS 사업과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강재홍 (ITS Korea)

ITS 사업이 일과성,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다. ITS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TS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TS는 정부주도형 산업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는 국가가 산·학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내

추진중인 통합교통정보서비스가 원활한 공조체계로 성공하길 바란다.

패널토의에 이어 객석에서 참석자의 의견이 개선되었다.

조중래 대한교통학회회장은 ITS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공공과 민간,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각 영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반성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과천시 최봉순 주시는 과천시 ITS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서울시와의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LG전자의 최광주 책임연구원은 IT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정된 시간을 넘긴 정책토론회는 국토연구원 이규방 원장의 초청 리셉션으로 마무리 되었다.

3. 총평

199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ITS는 1997년 ITS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ITS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교통, 정보통신 분야의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모인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론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ITS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보통신의 시각이 부족했다는 객석의 평가가 있었으나, 하루에는 다루기 벅찬 여러 주제와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토론의 막바지에도 자리를 뜨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ITS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ITS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리였다.